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n insurance

The Financial Insurance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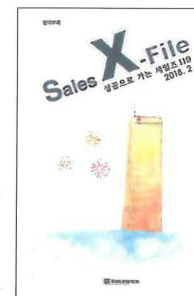
February 2018

Vol. 287



“FP 모두가 특별한 존재” 한화생명, 13월차 FP 위한 ‘특별한 돌잔치’

“新손보시장 창출기”... 마취·수혈치료, 車사고 벌금까지
종신보험 ‘이율 경쟁’ 본격 접화... “양로보험도 꿈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이들이 취득할 보험금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 판결 (파기환송)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 보험자인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소외 1,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 그 외에는 소외 1로 하는 보험계약(상해보험)을 체결했다.

- 위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의 보장내용은 소외 1이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 소외 1은 개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소외 1에게는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외에 자녀인 소외 2와 소외 3이 있었다.

- 원고는 소외 1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보험금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제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 판결

소외 1의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만 심리한 후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반소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 판시,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했다.

[제2심] 창원지법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 피보험자인 자신의 사망에 따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그 상속분

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1의 상속인으로 피고 외에 소외 2와 소외 3이 더 있다면 피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평석】

1. 대상판결은 인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이들이 취득할 보험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대상판결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사안에서 보험사가 법정상속인 중 일부분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불완전한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방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 보험금 전액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법정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까지 인용한 바,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고 법정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우선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상법 제639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에도 준용된다.

이에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해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해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기재했다면, 이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결과로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이 될 사람들을 상해 시의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그런데,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이들 각 법정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금 전액인지, 아니면 상속분으로 한정되는지가 문제이다. 이는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보험계약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일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상속분과 무관하게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이는 그 동안의 실무상의 관행에도 부합한다. 즉 그 동안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거나 보험수익자를 정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해 왔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상속분만큼의 보험금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배우자인 피고는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5000만원 중 자신의 상속분(3/7)만큼만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고, 나머지는 소외 2와 소외 3이 각 2/7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원심으로서 이를 기초로 원고의 청구는 사망보험금 5000만원 중 피고의 상속분(3/7)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부존재하고, 피고에게는 상속분(3/7)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라고 하면 족하다.

만약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보험금 문제까지 일거에 해결하고자 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병합신청을 하거나, 피고로서는 나머지 상속인들인 소외 2와 소외 3으로부터 각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가 전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면 쉽게 해결됐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은 어쩌면 보험사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것인데(보험사가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종종 상속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원심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이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하지 않았고, 원심법원도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법판결의 결론은 보험계약자의 의사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지극히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LnS**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배우자인 피고는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5000만원 중 자신의 상속분(3/7)만큼만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고, 나머지는 소외 2와 소외 3이 각 2/7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글_ 박기억 변호사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분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에서 위원(보험편)으로 근무